

남·북한 통일대비 사회통합을 위한 직업교육의 역할 탐구 -통일 독일의 사회적 통합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Exploring the Role of Vocational Education for the Social Integration in Preparation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 Peninsula

이성균

서울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학과

Sung-Kyun Lee(lsk@sdu.ac.kr)

요약

본 연구는 독일이 통일 후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동독지역의 경제적 안정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노동력 재생산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교훈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이 점진적으로 안정된 평화통일을 하든, 갑작스러운 북한의 붕괴로 인한 흡수든, 어떠한 통일 상황에서도 남·북 전체의 경제적 안정을 통한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족의 화합과 동질성 회복, 정체성 확립을 위해 무엇보다도 새로운 교육체제통합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별히 북한 주민과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북한지역 노동시장과 경제생활의 안정화를 위해 직업교육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우선 통일 후 동·서독의 사회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경험, 즉 사회적 안정과 경제생활을 위한 직업교육 정책의 추진과정에 대한 선행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동독과 서독지역의 직업교육의 차이와 통합 추진 체계 과정 분석은 물론, 통합을 위한 직업교육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동·서독 각자 직업교육의 특별한 여러 차이점 속에서도 이원화제도라는 유사한 하나의 체제를 공통점으로 찾아 협력하면서 노동시장의 통합과 경제적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직업교육정책을 이끌었다. 그러나 경제사회적 통합을 위한 서독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동독지역이 이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나타나 정책실패의 결과를 보기도 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남·북 통일을 대비한 차원에서 진정한 내적통합을 이루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자립, 자활을 촉진시키고, 노동시장의 안정화와 경제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직업교육의 효과적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중심어 : | 통일독일 | 통일한국 | 사회적 통합 | 직업교육 |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lessons and implications of Germany's measures for the social integration after the reunification, and especially the Germany's measure on labor reproduction for the economic stability of East Germany. This analysis indicates, whether South Korea is going to achieve gradual and peaceful reunification or absorb North Korea due to its sudden collapse, that the reunification, in any case, requires the social integration through economic stability of both North and South. In order to ensure national reconciliation, recovery of homogeneity, and establishment of identity for the economically stable social integration, the new integration of educational system is necessary. Especiall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role and direction of vocational education for the stability of the North Korea's labor market and economic life in order to socially integrate South Koreans with its Northern counterparts. First of all, this study examined a priori example of the experiences during West Germany's social integration process, i.e. the vocational education promotion process for the social stability and economic life. It figured out the problem of vocational education for the integrity as well as analyzed the vocational education differences and integration promotion system between East & West Germany. Even though East and West Germany showed their disparities in each vocational education, they corroborated each other by finding one similar system such as bifurcation, which lead to the integration of the labor market and new vocational education policy for the economic stability. Despite the West Germany's support for the socio-economic integration, nevertheless, the East Germany's capacity turned out to be insufficient, which resulted in the failure of the policy. Based on above discussion, this study intended to suggest the efficient solutions of vocational education for the internal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by promoting the independence and self-support of North Koreans and leading the stability of labor market and economic for the future reunification.

■ keyword : | Unified Germany's | Unified Korea's | Social Intergraion | Continuing Vocational Training |

* 본 연구 논문은 서울디지털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 받아 이루어졌습니다.

접수일자 : 2016년 05월 03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7월 11일

수정일자 : 2016년 06월 24일

교신저자 : 이성균, e-mail : lsk@sdu.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의한 남·북 관계 정상화를 통해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며, 이것을 위해 통일 대비 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 준비를 구상하자는 것이다. 즉,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쌍방 지향적이며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990년 10월 3일 통일된 독일에 비추어 보자면 남·북 관계는 아직도 갈 길이 여전히 매우 멀다.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핵문제는 남·북 관계의 부분적인 진전조차도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을 정도로 놓이게 했다[1].

특히 4차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로 인한 개성공단의 폐쇄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등, 이러한 급격한 상황변화에서 지금까지 통일 대비 및 통일 후 통합에 대한 대부분의 통일정책 연구방향은 점진적인 통일 또는 단계적 평화통일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서 북한체제의 불안한 구조는 갑작스러운 붕괴로 이어져 뜻하지 않은 흡수통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 후를 대비한 사회통합적 관점에서의 구체적인 정책방안 연구들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독일 통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동·서독의 경제사회 통합을 위한 직업교육제도의 동질화 과정과 노동시장 통합의 성과에 대한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이다. 또한 한국이 어떠한 통일 상황에서도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족의 화합과 동질성 회복, 정체성 확립 및 남·북의 이질성 극복을 위해서는 북한지역에 새로운 민주사회체제의 적용과 남북한 노동시장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교육에 대한 교육체제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다. 특별히 남·북의 상이한 경제사회체제의 통합을 위해 북한지역의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 및 직업교육을 통한 노동시장의 통합 구축 없이는 사회시스템의 통합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그에 대한 역할 모색이 연구 과제이다.

여기서 직업교육은 민주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

와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양성은 물론 민주 시민으로써 개인의 적성과 능력개발 및 행복과 자아실현을 추구함에 있어 기본적인 교육형태라고 할 수 있다. 통일 후 남·북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들에게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통해 노동시장 및 경제생활의 안정화를 이끌어야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우선 선행되었던 독일 통일의 통합과정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토대로 사회적통합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었던 문헌연구이다. 그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독일 통일 후 동독지역 교육통합 연구” 권오현 (2006, 한국독일어문학), “독일 통일 20년-사회·문화적 통합의 성과와 시사점” 양민석, 송태수 (2010, 한독사회과학논총), “통독 20년 구동독 지역 노동시장정책의 성과와 교훈” 최승호 (2011, 한독사회과학논총), “독일 통일 후 동·서독 교육통합 사례연구” 강구섭 (2012, 비교교육연구) 등에서 통일 동·서독의 경험을 통해 나타난 사회통합의 다양한 추진체계에 대한 선행적인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으나, 내적 통합을 위한 동·서독지역의 직업 재교육의 역사적 배경과 통합 후 법적근거 및 추진 과정을 다루는 연구는 거의 전무했다. 그래서 경제와 사회적 통합에서 노동시장정책의 변화에 따른 직업교육의 영향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었다. 그러한 연구를 위해 독일 각 기관과 관련 연구소가 제시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 후 동·서독의 사회적 환경 및 직업교육을 통한 노동시장정책의 변화가 통합을 위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논의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시사점을 주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남·북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진정한 내적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복지 등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북한 주민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의 자립, 자활을 촉진시키기 위해 직업교육의 활성화와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지

원을 위한 계속교육 및 재교육의 효과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방향이다.

여기서 남·북한 통일대비 직업교육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사례연구들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남북한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교류 및 협력 방안 연구” 강일규 (2000, 통일연구원), “직업능력개발 관련 대 북한 협력의 방향과 과제” 강일규 (200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통일시대의 남북한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교육행정체제의 구성 방안” 신현석 (2005, 교육행정학연구), “남북한 통일 이후 사회통합과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정하운 (2012,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법적정책 과제” 정용상 (2013, 한국법정정책학회), “남북통일과 시민성-세대갈등 통합과 교육적 과제” 이인정 (2013, 도덕윤리과교육) 등. 그러나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 지역 내의 실질적이고 절실히 요구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 연구는 드물었다. 특히 북한의 경제와 노동시장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기제로서의 직업교육 훈련체제 구축은 사회통합의 중요한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문헌연구 및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고자 한다.

3. 용어 정의

서로 다른 체제의 이념적 대립을 완화하고 통일과 통합의 과정을 이루어 가는 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제도적 통일과 통일의 완성인 내적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양쪽이 갖고 있는 내부적 갈등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먼저 통일이란 좁은 의미에서 두 체제가 일정한 영토 내에서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며[2], 넓은 의미에서는 정치적 통일 이후 사회문화적 통합을 이루어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갈 수 있는 조건의 성취 결과를 의미 한다 [3]. 그리고 통합이란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 할 수 있겠지만, 두 개 이상의 구성요소들이 새로운 하나의 전체를 형성하기 위한 조건 성취 과정이라고 볼 때 이질적인 요소나 구조를 새로운 질서에 편입하는 것 또는 편입 후 개별적인 요소들이 전체 내에서 결속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즉, 하나의 사회가 지향하는 기본적인 목적, 가치 및 행동양식 등에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

질 때 진정한 사회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4].

이러한 이질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통합이란 바로 정치적, 제도적 측면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인 것이다. 분단된 두 체제가 하나로 결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정이 모두 성취되어야 한다. 그것의 하나는 외형적 통일이고, 다른 하나는 내적 통합으로써 동질성 회복일 것이다. 독일 통일에서 보듯이 외형적 통일은 서독에 의한 흡수통일로 이루어졌지만 가장 중요하고 힘든 과정인 내적 통합, 즉 동질성 회복은 이십년이 지나가도 완벽한 통합을 이루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독일은 통일과정을 둘러싼 동·서독 통합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인 형태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동·서독 양측 간의 상황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은 불신과 내적 갈등 상황이 잠재해 있었던 것을 간과하고 말았다. 동·서독 통합의 문제는 동독인들이 서독의 사회체제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적응할 것인가의 문제라기보다는 동·서독의 양측 관계가 통일된 사회에서 어떻게 서로 조화로운 삶을 영위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간에 뿌리 깊게 형성되어 온 이질화된 갈등 구조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 즉, 이념적 갈등, 문화적 갈등, 세대적 갈등, 지역적 갈등, 경제적 빈부의 갈등 등, 다양한 형태의 갈등들을 해소하는 것이 진정한 통합의 과제일 것이다.

특히 북한의 억압된 정치체제와 경제적 낙후성 및 남북의 국력 차이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불평등과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사회통합의 큰 장애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체제의 통합에는 안정된 공동체 형성을 위한 배경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회, 문화적 통합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경제와 노동시장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기제로서의 직업교육 훈련체제 구축은 사회통합의 중요한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이 연구에서 다루려고 하는 직업교육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위해 용어에 대한 혼란을 막고, “직업교육”과 “직업교육훈련”이라는 두 용어 선택의 의도를 언급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직업교육은 근로자 자신이 직업적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 및 산업현장에서의 전문성 개발 등, 전체 교육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직업교육훈련은 직업교육을 포함한 넓은 의미와 직업교육에서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숙달과 반복의 교육적 의미로 최근엔 교육과 훈련의 개념을 통합하여 직업교육훈련(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은 교육기관에서의 교육과 산업분야 현장에서의 훈련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독일에서는 이 개념을 Ausbildung(양성훈련)으로 사용하며, 이 용어 안에는 Bildung(교육)이라는 교육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직업교육과 훈련에 대한 구분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II. 독일 통일 후 사회통합을 위한 직업교육의 정책

1. 통일 과정에서 사회통합의 과제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1961년 이후 28년 간 독일의 분단은 1989년 11월 9일 상징적인 국경이 허물어지면서 막을내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독일의 통일과정을 [표 1]과 같이 10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1990년 7월부터 사회통합 및 경제와 화폐 통합을 위한 동서

표 1. 독일 통일의 10단계[5]

단계	독일 통일의 단계별 과정
1단계	신동방정책 및 동방조약: 서독의 동방정책을 통한 1970년대 일련의 동방조약 체결 (동서독 관계 정상화)
2단계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의 와해: 동구권 국가들의 점진적인 민주화 진행 (1989년 가을 동독주민 1만여명 서독으로 탈출)
3단계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 동독의 새로운 여행규정이 “지체 없이, 즉시” 발효된다는 잘못된 발표로 국경이 자연적으로 붕괴 됨
4단계	통일을 위한 10가지 계획 발표: 1989년 11월 28일 폴 수상은 즉각적인 경제원조를 비롯한 연합체제 구축을 준비 함
5단계	동독 인민의회 총선거: 1990년 3월 18일 민주주의 선거원칙에 입각한 동독 인민회의 마지막 선거 시행 (동독의 계획경제체에서 시장경제체제로)
6단계	사회통합, 경제와 화폐 통합: 1990년 7월 1일 동서독 간의 경제, 사회 통합에 관한 국가조약 발표 (동독의 계획경제체에서 시장경제체제로)
7단계	2 + 4조약: 1990년 9월 12일 동서독, 미국 및 소련, 프랑스, 영국 등이 모스크바에서 독일문제의 최종 해결에 관한 조약 서명
8단계	통일 조약 발표: 1990년 9월 29일 독일 통일 조약에 의거 1990년 10월 3일 부터 동독이 서독에 편입 됨을 인정 함
9단계	독일의 통일: 1990년 10월 3일 독일의 통일
10단계	독일의 총선: 1990년 12월 2일 최초의 전 독일 총선거 실시, 제12대 독일연방 비준

독 간의 통합 조약이 발효된 6단계를 보면, 동독이 서독에 편입되기 전 이미 통합에 대한 서로의 논의가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통일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체제에 직면한 동독인들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은 학교교육을 통해서만 다루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 일반적인 학교교육의 새로운 교육통합은 물론, 체제의 변화 속에서 구동독 주민들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기술과 생활능력을 습득하게 하는 것은 어려웠다. 특히 제도적 교육체제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기란 쉬운 것이 아니다. 동독 주민 뿐만 아니라 서독주민들도 독일 통일이라는 새로운 변화 속에서 서로 상이한 가치관과 정체성 및 문화적 특성에 대한 수용과 포용을 위한 학습의 기회를 필요로 하였던 것이다[6]. 특별히 통일 후 이전 체제와 상이한 사회, 경제적 상황에 직면한 동독인들에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과 같은 영역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지식 및 생활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의 기회 제공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 이러한 지식과 기술 및 생활능력 습득은 평생교육적 차원에서 성인들에 대한 계속교육을 통해 가능하였으며, 새로운 직업교육을 통해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핵심적인 과제였다.

2010년 이후 동·서독의 균형발전을 위한 하나의 새로운 사회적 통합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것은 특히 지역의 고등교육기관들이 전문직업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교육체제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직업 아카데미라는 새로운 형태의 대학들이 만들어졌다. 직업 아카데미는 백화점식의 많은 학과를 갖고 있는 기술대학과는 달리 특성화된 몇 개의 학과로 구성하여 지역과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을 반영한 학과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오히려 기술대학 보다 더 실무중심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들 학교는 동·서독이 동일하게 실시해 왔던 “이원적 체제(Dualsystem)의 직업학교처럼 이론 교육과 기업체에서의 실습 교육을 병행하면서 이론뿐만 아니라 현장의 실제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독일 전체의 지역적 격차, 즉 동·서지역의 균형 잡힌 산학협

동이 잘 이루어지는 학교형태로 발전 되고 있다. 이 직업 아카데미에서 3년의 수업 연한을 마치고 디플로마 시험에 합격하면 부분적으로 학사학위를 받게 된다. 이러한 교육체제의 변화는 또한 동·서지역의 내적 사회통합은 물론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실무중심의 교육과정과 연구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이원화하는 대학별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국제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독일의 사회경제통합 과정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기대하였던 것 보다 제한적인 면들이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는 남·북통일과 정치적 통합 과정은 독일의 흡수통일과는 달리, 우선 북한지역을 특별행정지역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초기 통합단계에서 북한 경제를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세우는 것이 남·북의 내적 통합을 이루기 전 먼저 추진해야 할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통일 전 동·서독의 경제, 사회적 격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남·북한의 큰 격차는 그리 쉽게 해소될 수 없다고 보며, 이러한 해소를 위해 오랜 시간과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 동·서독 양국은 통일 전에도 직업학교의 이원화형태를 서로 똑 같이 유지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통합을 위해서도 동일한 직업교육훈련제도를 이어 갈 수 있었다. 그러나 남·북한이 통합된 사회경제적 시스템 정착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교육형태를 통합시켜야 하며, 새로운 직업교육훈련 제도를 통해 북한 주민의 대량 이주사태와 실업 및 북한지역의 사회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면에서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독일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교육체제의 개혁과 변화가 우리의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통합의 진행과정에서 볼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과 진행절차에 있어서는 중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사회통합을 위한 노동시장의 현실과 직업교육의 필요

2.1 노동시장의 변화와 직업교육의 요구

독일의 통일은 사회주의 국가였던 동독을 서독의 민주체제 안에 편입시켰던 역사적 임무수행이었다. 1990년대 초부터 서독 정부의 근로촉진책(Arbeitsbeschaffungs-massnahme)에 따른 연방노동청의 직업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그에 따른 참여자들의 수가 증가하던 시기에 통일이 이루어졌고, 구 동독지역의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한 대량 실업사태는 그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직업의 재교육 및 계속교육의 필요성을 더 고조시켰다. 통일 후 구동독 지역의 경제구조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지역 근로자들에게 순환교육 및 재교육 등의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시행이 절박하였던 것이다. 특히 동·서독의 상이한 사회경제체제의 통합 중에서 금융시장 및 상품시장의 통합보다 노동시장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인 여건 조성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독일의 직업교육제도는 중세시대부터 이루어졌던 도제제도와 세계 2차 대전을 거쳐 형성되어 왔던 직업이원화 양성제도를 통해 이미 동·서독이 지속적으로 유지해온 이론과 기술훈련 병행의 직업교육 훈련제도로 노동시장의 통합을 위한 발판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이와 같은 통합의 변화와 결과는 독일연방정부의 통계자료를 통하여 경제통합은 물론 노동시장의 통합과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통일 이후 동·서독 경제통합의 지표를 지역별 1인당 GDP의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동독 지역의 1인당 GDP는 [그림 1]에서와 같이 1991년 9,531유로로 구서독지역의 1인당 GDP 2만 1,852유로에 비해 불과 약 33%였다. 그러나 그 후 7년간 지속적인 증가로 1997년 구동독 지역의 1인당 GDP는 1만 7,036유로로 구서독지역의 2만 4,941유로에 약 62%까지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 1998년부터 2013년까지의 변화는 그 증가 속도가 매우 완만하게 진행되어 거의 동등한 성장을 보여 주고 있다[7].

여기서 주시해야 할 것은 2010년 유로존의 위기라는 큰 불안 속에서도 구동·서독간의 GDP의 격차가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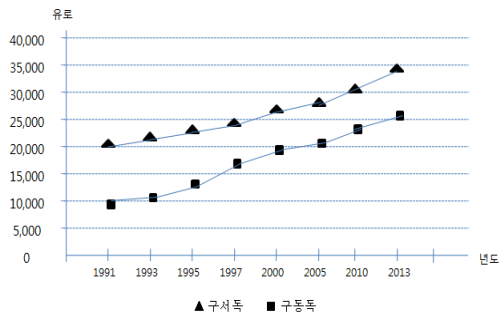


그림 1. 구 동·서독 지역의 1인당 GDP (1991~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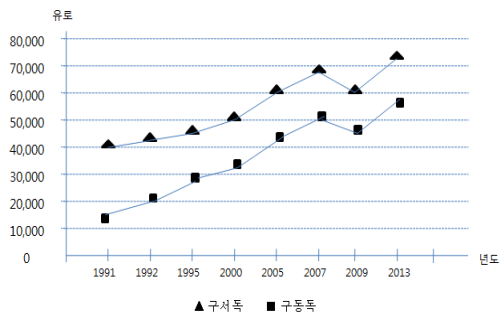


그림 2. 구동·서독 지역 제조업 피고용자 1인당 부가가치 수준 (1991~2013년)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동등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통해서 안정적인 경제통합의 과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통일 이후 노동생산성에 대한 변화를 [그림 2]와 같이 지역별 제조업 부문의 피고용자 1인당 부가가치 정도를 통해 알 수 있다. 구 동독지역의 피고용자 1인당 부가가치는 1991년 1만 5,532유로로 나타나 구 서독지역의 4만 1,781유로의 약 30%에 불과했지만, 5년 동안 약 3만 0,629유로로 증가하여 구 서독지역의 4만 7,674유로의 약 60%까지 접근하였다. 그 이후 구 동·서독 지간 격차는 줄어들었고, 유로존의 위기가 있었던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같이 하향곡선을 그리다가 격차의 큰 변화 없이 급증하여 2013년 구동독이 5만 5,910유로로 증가하였고, 구 서독지역 7만 4,822유로의 약 70%까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구 동독지역의 급속한 노동력 향상은 독일의 경제통합은 물론 노동시장의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음을 나타

내고 있다[8].

이와 같이 통일 후 초기 단계에 상이한 경제적, 사회적 통합으로 인한 충격과 기술혁신 및 세계화의 변화로 인하여 나타난 충격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 동독지역에 시행했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¹⁾ 경제와 노동시장 및 직업교육의 관점에서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특히 직업교육은 구동독이 시장경제로 전환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끌었다. 그러나 이 정책이 노동시장 통합에 단기적인 효과를 주었고 지속적으로 통합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장기적인 직업교육 훈련제도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2.2 동·서독 직업교육의 차이점과 통합의 과제

직업교육이란 초·중등학교 의무교육 과정 후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미취업자 또는 직업을 갖고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 실시되는 교육이라는 사전적 정의 보다는, 직업교육의 목적에 관한 논의를 통해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즉, 모든 사람들이 직업에 관한 소양을 개발하여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함은 물론, 직무능력의 개발과 개인의 진로선택을 통하여 자아실현을 하게 함으로써 사회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으로 볼 수 있다[9]. 또한 성인의 직업생활을 위한 지속적인 자기개발 교육을 일컫는다고 본다.

통일 이전 동·서독은 서로 다른 사회경제체제를 갖고 있었으나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사회를 지향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된 양국은 직업교육의 이원화제도에 기반을 두고 직업교육훈련을 유지한 것은 통일 후 노동시장의 통합을 위해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제도적인 면에서 직업교육의 차이점은, 구서독의 경우 법률체계 속에서 시장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며, 기본적으로 교육경쟁력을 통해 인적자원개발을 이끌어 갔으나, 구동독의 경우 교육의 이상과 가치 실현은 물론 개인의 자아실현조차 추구하기 힘든 국가의 통제와 검열을 통한 집단주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1)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는 단시간근로(short time work), 단기직업훈련(training), 조기퇴직(early retirement) 및 고용창출프로그램(Arbeitsbeschaffungsmassnahmen) 등을 말한다.

표 2. 구 동 · 서독 직업교육 시스템의 비교

구 분	서 독	동 독
직업교육의 초점과 사회적 기능	-교육 참가자의 능력과 기술을 개발 -전문인력을 노동시장에 제공 -교육과정 개발, 자격취득, 훈련 및 질 관리	-산업목표에 맞는 기술 습득 -산업현장 파견
직업교육의 선택권과 재정 부담	-기업은 법과 규정에 따라 교육내용, 범위 및 기간을 자유적으로 결정 -정부의 공적 자금 및 기업이 투자	-정부의 주도하에 교육 -공공자금만 지원
기업교육의 규모	-중견기업 및 대기업 교육 : 65% -소기업 교육 : 35%	-대기업 교육 : 97% -소기업 교육 : 3%
직업교육 분야별 분포	-제조 및 가공산업분야 : 52% -서비스산업분야 : 48%	-제조 및 가공산업 : 80% -서비스산업 : 20%

독일에서의 직업교육은 이원화제도에 기반을 둔 것으로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동·서독의 경제체제가 다른 구조에서는 [표 2]와 같이 서로 다른 형태로 직업교육이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10].

동·서독은 분단 이후 각각 직업학교의 이론교육과 기술훈련을 병행하는 이원화 제도를 유지해 왔지만, 서로 상이한 체제와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그 후 1990년 7월 경제적, 사회적 통합을 이끌면서 서독의 기본법을 동독에 확대 적용시키기로 통일협약을 체결하였고 구동독은 빠른 속도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었다. 이 통일과정에서 직업교육훈련제도의 변화를 통해 나타난 차이점을 살펴보고, 직업교육의 통합을 위한 과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로 서독은 경제의 다원화 구조 속에서 다수의 수공업과 중소기업이 직업교육을 주도해왔으나, 동독의 직업교육은 사회주의 경제계획의 중심인 대기업들이 교육훈련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통일 후 동독의 대기업은 분해와 도산으로 기업구조가 해체되자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사내직업학교에서 진행되었던 직업교육 시스템이 붕괴되고 말았다.

둘째로 서독의 직업교육은 전문지식과 이론 및 실제 기계와 장비를 조작하는 기능을 배웠지만, 동독은 직업훈련을 통해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기능적 측면과 함께 정치적 사상교육을 병행해왔다. 특히 동독의 경우 장비의 부족과 기계의 낙후로 실습보다는 이론에 치중하는 교육이 대부분이었다.

셋째로 서독의 직업교육은 업종별 기업체가 노동시

장에서 그들의 기술수요에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을 공급함으로써 직업훈련 직종을 조절하였으나, 동독은 직업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사회주의 교육목표와 국가의 인력개발계획 하에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동독의 경제는 낮은 생산성, 낙후된 물적 자본 및 시장의 경쟁력 상실로 인하여 통일 이후 붕괴에 직면하였으며, 실업대란으로 노동시장마저 파괴되어 갔다.

위와 같이 통일 직후 구동독의 세 가지 문제점을 보면서 서독정부는 동독지역의 돌발적인 실업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노동시장 부양책을 펼쳤으며, 노동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전문기술 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는 직업교육 및 훈련정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내적 통합을 위한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였다.

3. 독일의 사회통합을 위한 직업교육의 추진 체계

3.1 직업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와 자격 인정

구동독의 직업교육목표는 개인적인 발전 및 교육의 이상과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자아실현 보다는 정부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집단주의적 교육 속에서 획일적인 성격의 노동인력을 양성해 왔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의 교육시스템을 서독의 전통적인 교육목표인 준법성, 도덕성, 근면성 및 사회적 의식의 개혁성이 바탕이 된 상태의 직업교육의 전환과 사회적 의식교육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였던 구동독의 경제체제는 1990년 1월 12일 새 헌법의 제정으로 사유재산이 허용되었고, 7월 1일 화폐통합을 비롯한 경제 및 사회통합을 위해 국가협약이 시행되면서 시장경제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그러나 통일 후 동·서독의 노동시장의 변화와 악화된 경제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일 정부는 복합적인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었고, 여기서 노동시장은 여러 환경적 요인들 즉, 정치적 환경, 산업화 단계, 노동시장의 구조, 각종 노동보호법 및 교육훈련제도, 노사관계, 인구구성의 변화와 같은 환경적 요인들에 의한 상호 복합적인 작용을 통하여 영향을 크게 받았다[11]. 이러한 특성에 따라 통일 독일정부는 법과 제도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동자의 지속적

인 능력개발을 통해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고용 조정 및 임금 조정을 함께 병행하면서 실시하였다.

통일 독일의 사회적, 경제적 변화는 노동시장과 직업교육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지만 이에 못지않게 현대의 급격한 산업사회의 변화는 더 전문화된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면서 노동자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으며, 구동독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의 변화 또한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구서독의 법 체제를 근거로 한 동독지역의 직업교육이 실시되기 이전, 1990년 5월 18일 “화폐, 경제 및 사회통합에 대한 국가협약”에서는 이미 근로촉진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협약내용 중 19조에 보면 근로촉진을 포함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내용도 언급되었다. 그 후 1990년 9월 29일 “Einigungsvertrag”(통일조약)의 37조에는 교육에 관한 특별규정²⁾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 조항은 통일 이전 동독에서 취득한 자격에 대한 인정여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구동독 국가가 공인하는 학교교육 및 대학은 물론 직업교육을 통하여 얻은 자격증은 독일 내에서 동등한 취급과 권한을 부여 받는다.

둘째, 직업양성훈련을 통한 졸업시험 및 기능시험도 동등하게 인정하며, 전문직 조직법에 의하여 응시한 시험 합격증도 인정한다.

셋째, 구동독의 기술학교 졸업, 전문학교 졸업 및 대학 졸업의 인정 또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교육문화장관 협의체(KMK: Kultusministerkonferenz)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통일 이후 직업교육과 관련되어 중추적인 위치를 가진 법규는 첫째로 ‘직업교육법’이며, 둘째로 ‘고용촉진법’이고, 셋째는 직업교육에 유효한 ‘성인계속교육법’이었다. 직업교육법은 구 동독지역의 경제 및 사회적 환경에 적합한 직업교육을 강조하였으며, 고용촉진법은 연방교육청이 노동시장의 변화를 고려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노동시장과 직업에 대한 연구

를 병행하도록 만들어 왔다. 성인계속교육법(Weiterbildungs- und Erwachsenenbildungsgesetze)은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일반교양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 독일정부는 직업교육에 있어서 경제와 사회의 상호관계와 목표를 정책적으로 조정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각 지방정부간 직업교육 훈련정책의 수평적 조정과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강력한 수직적 협력을 이끌어 가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관계는 직업교육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조정하고 공조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시스템 형성과 혁신적인 모델개발을 통해 평가 및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서 직업교육의 재정은 시장경제에 의해 교육의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는 시장모델형태와 시장의 경쟁 매커니즘에 의해 소비가 과잉 조장되거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조장되었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국가모델의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체에 따라 재정적 지원이 공공 또는 민간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나, 대부분 재정적 지원시스템은 연방정부를 비롯하여 주정부, 협의체, 기업 및 개인 등이 [그림 3]과 같이 연합한 혼합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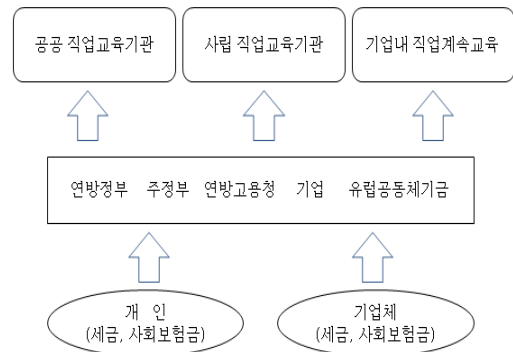


그림 3. 직업계속교육의 재정적 지원시스템[12]

3.2 직업교육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독일 통일정부는 구 동독지역 직업교육의 필요성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고용창출을 위한 노동시장정책의 핵심으로 계속교육, 이직교육 및 기업 내 적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것을 진행하기 위한 전문가와 담당자

2) 통일협약: 1990년 체결되었던 통일협약 37조 1항은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동독과 서독의 통합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협약을 통해 구동독의 이원화 직업학교에서 획득한 직업의 자격은 서독에서도 인정되는 법적인정제가 마련된 것이다.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uer Verbraucherschutz, 2014)

를 구 동독지역에 집중 과전하였다. 직업교육훈련을 관장하는 주요 기관인 연방고용청(Bundesanstalt fuer Arbeit)이 구 동독지역에 지방노동사무소를 설치하여 계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새로운 경제체제가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이끌어 갔다. 또한 연방고용청은 이 지역의 직업교육을 특별한 임무로 지정하면서 구서독과 동독지역의 직업교육기관들이 상호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초기 동독지역의 실업자와 교육을 희망하는 재직근로자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과 교사 및 교재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물론 점차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교육의 급격한 발전이 있었으나, 제공된 교육의 질적인 인증 시스템이 갖추어 지지 못한 것에서 또 다른 문제인 경제적 퇴보와 미래의 불확실성만 증폭시켜 갔다. 이와 같은 문제는 구 동독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보다는 서독의 교육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연방고용청은 이런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구 동독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적합한 직업교육의 과정을 개발하여 적용하였으며, 교육내용으로는 일반 법률을 비롯한 노동법, 세법, 보험법과 사회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새로운 기술과 산업별 혁신, 마케팅과 판매, 인적자원관리, 자기 주도적 실행 능력, 안전보호규칙 준수 등과 같은 동독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교육내용을 제공하였다. 직업교육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연방고용청은 고용촉진법에 따라 실업급여와 같은 지원보다는 고용창출사업과 근로자 직업교육을 위한 지출 비용을 더 확대하고 단기 및 장기간의 교육과정과 이직교육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993년 통일 초기부터 연방고용청 전체예산의 약 51%를 노동시장정책사업에 투자했으며 이 중에서 약 33%를 구 동독지역의 지원함으로써 직업교육정책을 활성화할 꾀했다[13]. 그러나 구 동독지역의 직업교육기관들이 이것을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많은 기관들이 폐쇄되었고, 민간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기관들이 늘어났다. 또한 통일 후 동독지역의 수많은 교육 참가자들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교사의 부족현상이 나타났으며, 검증되지 않은 교육 강사 채용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을 강화했지만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끌었는지의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판단된다[14].

유럽연합(EU)의 경제적 안정과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한 인력개발정책은 통일 후 독일 직업교육의 변화에 영향을 끼친 중요한 환경적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하기도 했다.

III. 독일의 사회통합을 위해 직업교육의 역할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 사회경제적 통합 과정이 주는 시사점

독일 통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험, 즉 사회경제적 혼란을 직업교육 훈련정책을 통한 노동시장통합으로 해결한 것은, 우리에게도 통일 후 그와 같은 제도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본다. 독일의 사회적, 경제적 통합에 필요한 소요 기간에 대한 여론조사(Saechische Langsschnittstudie 2007)에서 통일 직후 예상했던 6년에서부터 많게는 8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과는 다르게 2006년 이후의 경제적 통합과 내적통합에 필요한 기간을 각각 한 세대 또는 40여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15]. 이 처럼 사회문화적 통합과정은 동독의 공동체적 구조인 사회주의 삶의 양식을 서독의 경제적 자본주의 삶의 양식으로 대체해 나가는 과정이었기에 그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었다[16]. 구동독의 경우 사회통합과정은 한 쪽 사회가 일방적으로 변화해야 하는 것으로 진행하면서 다양한 혼란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이러한 통일 독일의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통합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통일 초기에 나타났던 모습은 통일에 대한 적응과 변화에서 경쟁사회라는 사회경제적 불안정이 점점 더 증가되었으며, 이러한 두려움은 극단적 적대감 혹은 극우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었다[17]. 이와 같은 적대감과 극우적 태도는 동독 국민은 물론 서독 국민들에게도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이 큰 집단에서 이방인에 대한 배타성이 더 강하게 발생했음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동독 국민들이 통일 직후

구동독 체제에 대해서 더 긍정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전체적으로 구동독의 과거에 대한 평가절하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것은 구동독 국민들의 보상심리를 발생시켰고, 과거로의 회귀를 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과거를 방어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었다[18]. 그러나 이런 과정을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적응과정으로 보았고, 사회제도적 통합과 선거 등을 통해 개별적인 의사 표현과 참여활동의 경험이 민주주의 및 정당체제의 모습임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동독은 물론 서독 국민들이 함께 갈등의 차이를 더 좁혀가기 위한 노력에 힘썼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특히 동독 국민들은 스스로를 '2등 국민'으로 판단하는 수가 64%에 달했고,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서독 국민은 13%정도라는 통계자료[19]를 통해서 동독 국민들은 동일한 일을 함에 있어 서독 국민에 비해 약 15~20% 정도로 적은 보수를 받고 있고, 구동독 지역에서의 직업교육의 내용도 낮은 단계의 수준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셋째, 이러한 독일은 사회의 내적 통합을 위한 기본 토대인 경제적 통합이 동·서독의 상이한 경제체제로 인하여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과 사회체제 및 의식체제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과제를 알게 하였다.

넷째, 이런 상황에서 구동독인들은 역동적인 변화보다는 사회적 안정을 요구하였다. 또한 동독지역의 체제 전환기 속에서 분배에 대한 불만과 열악한 경제상황 및 실업에 대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직업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들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통합을 이루어 갔다.

2. 직업능력개발교육의 역할과 시사점

이 연구는 통일 후 구동독지역 국민 개인의 생애를 개발하도록 돕는 광의적 의미의 직업교육이 사회적 통합 즉, 내적통합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았다. 서로 다른 체제가 가져다주는 상이한 교육의 의미를 개인의 생애개발에 초점을 맞춘 직업계속교육을 통

해 통합해 나가려는 것이었다. 동·서독 지역 간 동일 숙련에 대한 생산성의 격차 및 임금격차가 작아질 경우 노동시장 통합이 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이것은 직업교육 훈련제도의 적극적인 시행 결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독일 직업교육 훈련제도가 통일 독일의 경제적 통합은 물론 노동시장 통합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음을 앞서서와 같이 입증할 수 있었다.

직업능력 개발교육 후 국가는 고용확대를 위한 고용 촉진책을 시행했고,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기업들은 교육투자를 뒷받침 해 왔다. 또한 직업교육에 관련된 정보와 상담이 체계적으로 이끌어졌으며, 이러한 직업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동·서독 지역 모든 국민들의 필요성 인식과 함께 직업과 계속교육의 병행으로 이루어져 왔다.

독일의 직업교육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의 기회를 높이고 이들을 재훈련시키는 의미가 있었다. 특히 사회주의체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적응시키기 위한 체제 전환적 교육을 시도했던 것이다. 둘째, 실업자에 대한 교육의 기회 확대와 참여를 유도하고 이것을 위해 일정수준의 우선적인 생계 보조비를 지원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직업교육에 있어서 시장경제체제의 작동원리와 새로운 체제에 대한 적응능력을 배양하고, 기술 및 기능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졸업 후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 직업연계 기능을 통해 안정화된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던 그들의 노력이 사회통합의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그러나 직업교육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이 안겨다준 문제점들 또한 다양하게 나타났다. 우선먼저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특성과 시스템을 그대로 구 동독지역에 적용됨에 따른 부작용의 발생과 전면적인 시장경제질서의 도입에 따른 변화된 환경에 적극적인 적응 미숙의 문제점이 있었다. 계속 불만이 고조된 상황 속에서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의 효과는 제한적이어서 악화된 시장상황과 구서독지역에 비해 모든 것이 불안하고 높은 실업률의 장기화가 우려되었다. 구동독지역 국민들의 가치관과 교육태도가 수동적이며 방어적이었고, 가치평준화 사회체제에 길들여진 주민들에게 개인의 능력

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사회에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다. 한편 산업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구동독지역의 직업교육 내용으로는 단순제조업, 농업, 기술 분야의 교육비중이 높고, 서비스업 관련 분야의 교육은 미흡 하였다. 더욱이 구 동독지역의 경제 구조와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가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합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어려운 점도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고용촉진정책에 따른 직업교육에 참여 인원은 구서독 지역이 더 많았고 통일 이후의 경제변화는 산업체 내에서의 직업교육이 오히려 축소되거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다.

첫째, 직업교육에 대한 운영 방법 및 내용을 다양하게 선정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적극 도모 하였다.

둘째, 재원 및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과 신뢰할 만한 교사의 질을 향상시켜 갔다.

셋째, 직업교육은 실업자들이 노동시장과 계속 연계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인력개발과 조직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재직 근로자의 사전 실업을 예방하고, 직업능력개발에 동기를 적극적으로 부여하였다.

IV. 남·북 통일 대비 사회통합을 위한 직업교육의 역할과 방향

1. 북한의 교육체제와 직업교육

독일과 한국의 통일 접근방식에는 차이점이 클 수 있다. 독일의 경우는 서독의 흡수식 통일이었으나, 남·북의 통일은 서로의 인구 규모, 경제 수준의 격차, 북한체제의 완벽한 차단과 폐쇄로 인하여 예상하기 어렵다고 본다. 만약 남·북 통일이 남한 주도에 의해 성사된다 하더라도 통일 후 나타나는 문제점과 현상을 예측해 보면, 인구 대이동, 북한 내 실업사태, 직업의 불안정, 직

업능력의 차이, 기업체 시설 및 장비의 차이, 직업의식 및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 등은 견잡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혼란을 예측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먼저 북한의 직업교육의 현실을 파악하고, 통일 대비 남·북 경제사회적 통합에 필요한 북한 내 노동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직업교육의 새로운 체계 구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북한의 교육관련 법령에는 교육법, 보통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어린이보양교육법 등 그 내용구성을 보면 법이 규정하는 교육의 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비교적 일관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교육 법령은 북한의 대내외적인 변화와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에 대한 노선에 따라 학교교육 정책을 수정할 때 주로 정비되어 왔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북한의 공식적인 교육강령은 1977년 제정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통해 교육의 원칙을 제시해 왔다. 특히 2012년 9월 25일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채택하면서, 2014년부터 학교 전 유치원 과정 1년과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은 전문학교, 대학, 박사원, 과학연구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은 사회 국가적 수요에 따라 기술자나 전문가를 양성하는 종합대학, 부문별대학으로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다. 학교교육의 전반적인 교육내용은 정치사상교육을 가장 중시하였고, 현대 지식경제시대의 교육의 현대화, 과학화 및 정보화를 내세운 인재양성과 1984년 과학기술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김정일의 교육부문 책임일군협의회 연설을 통해 변화가 이루어졌다. 정치사상교육의 비중이 인민학교는 33.9%, 고등학교는 24.1%, 그리고 대학에서도 41.2%에 달한다. 북한은 특별히 직업교육만을 위해 내세운 교육기관은 찾아볼 수 없으며,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내용 구성에 따라 교육의 내용 안에 과학기술교육 및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라는 것에서 개인적인 목적보다는 체제 유지를 위한 목적의 기술교육을 이끌어 가고 있다[20].

그러나 학교교육 내 기술교육의 경우 낙후된 훈련설비와 기술, 비효율적인 과학기술정책, 현대 기술지식 전문가 부족 및 노동력 동원 등으로 인한 훈련시간 부족

은 노동력의 질적 수준을 우수하다고 판단하기가 힘들다. 더욱이 북한의 직업교육 또한 김정은 정치체제 유지에 중점을 두면서 경제수준이 과거 다른 사회주의권 국가들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지며, 지속되는 폐쇄적인 경제체제 운영과 군사적 핵무장 위주의 기술교육으로 인해서 그 외 노동력의 질적 수준이 매우 낮으며, 이 때문에 고급산업인력을 양성하는데 있어서도 교육수준이 더욱 낙후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교육법은 종적인 의무의 관념만 인정하고 권리는 무시한 규정이다. 법의 제정과 운영은 당의 정책과 이념에 따라 작용되어 왔다[21]. 여기서 북한의 모든 교육은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이념에 종속되어 있음을 볼 수 있고, 김일성과 김정일 및 김정은의 교시와 문헌이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어 교육관계 법령을 통해 교육제도를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2. 남·북 교육통합을 위한 교류 협력체제 구축 방안

장기적으로 통일 한국을 위해 남·북한 간 교육의 교류와 통합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것은, 독일의 경우를 보면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서로의 미래를 위해 전문인력, 즉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공동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질적인 교육통합의 길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우선은 남북한 공동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체계적인 진행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그러한 과정을 추진 할 때는 서로의 이념적 성격을 배제하고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발을 시도할 수 있는 교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교류 협력은 기본적인 조약체결을 통해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남·북한 교육 교류와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을 위해 6 단계별 진행과정을 아래와 같이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22].

- 1단계 - 남·북한 교육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동 연구 시도 (각 정부 담당부서 및 학자들 간의 공동 연구)
- 2단계 - 남·북한 교육법제에 대한 부분적 통합 (이념적인 성격을 배제한 공통적 관심 부분)
- 3단계 - 남·북한 교육 전문가의 교류와 연구개발 및

- 협력 사업 추진 (교육 프로그램 선정 사업)
- 4단계 - 남·북한 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 (지식기반 사회에서 실질적인 전문인력 양성 위주)
- 5단계 - 남·북한 교육 인프라 구축 협력 및 지원 시스템 구축 (교육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기틀 마련)
- 6단계 - 남·북한 교사 연수 및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학생교육 실시 (공동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이러한 제안의 토대는 KEDI(한국 교육개발원)의 제66차 교육정책포럼에서 소개된 남·북한 교육통합 방안에서도 그 필요성과 방향 제시를 통해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교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조직 구성 및 협력 계획 수립을 [표 3]과 같은 절차에 따라 추진해 나간다면, 상호이해관계 형성은 물론 신뢰 형성을 통해 평화적 통일과 내적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아래에 제시된 교류와 통합을 위한 협력체제는 이미 독일의 통합 과정에서 단계별로 조직을 구성하고 추진한 사례를 통해 충분히 그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독일 통일 후 동·서독 교육통합 사례연구” 강구섭(2012, 비교교육연구)의 연구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표 3. 교육 교류와 통합을 위한 조직구성 및 추진내용

절차	조직구성	추진내용
1	남·북한 직업교육 전담 기관 설립	직업교육 총괄 (지원)
2	남·북한 직업교육훈련개발 협의체 구성	직업교육 지도, 감독
3	남·북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소 설치	직업교육프로그램 개발
4	남·북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 지정	직업교육 시행 및 평가
5	남·북한 직업교육 인증 및 자격인정 기관 설립	교육과정 및 자격평가

3. 통일 대비 사회통합을 위한 직업교육의 역할과 방향

남·북의 통일도 독일의 경우와 같이 노동시장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는 바로 직업교육제도의 구축이라 하겠다. 여기서 직업교육은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시장경제체제의 원리와 새로운 체제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며, 기술교육 후 바로 취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위해 교육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정 수준의 생계비를 보조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특히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을 위한 북한지역 인력구조의 재배치 문제해결은 직업교육의 기회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이러한 직업교육의 재훈련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사회통합의 기본 조건인 경제통합을 위해서는 북한의 산업구조와 조직의 개편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균형 있는 산업정책과 더불어 직업교육을 통하여 전문인력 재배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까지 큰 비중을 차지했던 중공업부문의 산업구조에서 고용을 높일 수 있는 경공업부문을 향상시키며,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서비스산업을 위한 직접 생산부문과 연관성이 높은 부문부터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북한은 당의 정치지도와 경제적 행정지도가 기업관리의 지도적 역할을 해옴과 동시에 실무적 차원에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공장 지배인을 통한 이원적 관리체제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조직을 재구성 할 필요가 있다. 조직구성은 자본주의적 생산기업 시스템에 따라 책임경영체제로 정비하고 기업의 자율경제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경영기술을 향상시키며, 새로운 직업계속교육 체제를 통해 노동력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 남·북의 임금수준의 균형을 이루어 갈 수 있다.

둘째, 산업구조의 개편에 따라 인력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직업교육 및 기술훈련을 위해 남한의 정부 및 기업과 북한의 학교를 연결하여 기술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북한의 낙후된 교육환경과 기계설비에 따라 최신 기술교육을 위해 지원하고 교육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특히 북한 지역 산업체의 인력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기술훈련을 위해 남한지역의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 독일의 구서독과 구동독 지역 주정부간 협력을 위한 일대일의 관계 형성과 같이 남·북의 각 지역 간 자매결연을 통한 협력은 물론 기업의 물적, 인적 자원을 적극 지원하여 기술 및 경영기법과 운영의 노하우를 제공함으로써 서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자격취득과 직무능력을 위한 양성훈련을 비

롯하여 이직훈련, 재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직업교육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시해야 한다.

셋째, 직업교육은 이미 거론한 것처럼 훈련을 통해서 북한의 취업자 및 실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숙련된 기술과 지식이 정규 고용창출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경제통합과정에서 1대1 화폐통합과 고임금정책에 의한 임금인상은 기업의 생산성을 악화시켜 파산 및 실업률을 높이는 결과를 얻었다. 특히 구동독지역의 기업 고용구조의 변화는 정규직을 감소시키고 비정규직을 양산시켜 갔다. 이것은 노동시장 정책의 일환으로 직업교육의 공적 자금을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일자리 수행과 직업교육 후 지속적인 정규직 일자리 제공에 한계를 가져왔다. 구동독 기업의 직업교육 기피현상과 학교에서 실습교육이 빠진 훈련, 구동독의 노동의식과 사고방식 그대로의 교육 및 교육평가시스템의 부재가 이러한 문제를 가져오게 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통합 과정도 시장경제에 따른 급속한 변화와 낮은 생산성 및 공산주의 노동의식의 충돌을 막기 위해 사회적 인프라 조성과 남한의 합리적 직업교육 및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개인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과 창조적 능력을 갖춘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기반조성은 사회적, 경제적인 통합정책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통일 과정에서 북한의 인력은 남한의 산업인력과 통합하지 못하고 현재 중국의 조선족 또는 동남아 이주노동자와 같은 지위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남한의 직업교육체도가 통일을 대비한 사회적, 경제적 통합의 역할을 하기에는 많은 부분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남한의 직업교육 훈련제도를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직업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북한지역 인력의 교육 및 재교육에 일정한 역할을 하게 하며, 성인이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문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해 현재의 기능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1998년 기능대학의 시작에서 2006년에 24개 기능대학과 19개 직업전문학교를 통합한 한국폴리텍대학³⁾을 통해, 정규 직업교육 훈련제도

를 대폭 확대 개편하여 통일 후 사회통합은 물론 남·북한 노동시장 통합의 기제로서 일정한 역할을 하게 한다.

다섯째, 통일 후 남·북의 통합을 대비한다면 독일의 경우에서 보듯이 경제통합과 노동시장 통합의 단기적 원활한 진행은 통일 전 구서독과 구동독의 경제제도나 노동시장제도의 유사성과 공통점이 원인으로 제공되었다고 본다. 그것은 구 동·서독 양국의 직업교육이 이론과 사업장에서의 기술훈련을 병행시키는 이원화제도를 공통적으로 유지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유사성이나 공통점 보다 남한의 국가자본주의 방식과 북한의 국가사회주의 방식의 상이함을 고려할 때,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안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의 요소인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과 같은 방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직업교육은 다른 교육제도와는 다르게 시대적 상황과 환경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체계화하기 힘들다. 이러한 복잡성과 다양성의 특징을 갖고 있는 직업교육의 미래는 경제적 상황과 노동시장의 변화에 맞추어야 하며, 남·북의 통일과정에 따라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적 지원과 더불어 오랜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함을 독일의 통합과정을 보며 판단할 수 있었다.

V. 결론 및 논의

1. 결론

우리는 통일 이후 두 체제 간의 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육을 통한 진정한 남·북한 체제 통합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통일의 변화를 통해 남·북한 모두에게 있어 자유 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민주시민 교육은 통일 후 민주주의 가치를 지속시키고 북한 주민들을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다. 특히 체제적 통합이나 경제적 통합 과정 보다 더 복잡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이질성 극복을 위한 같음과 다름에 대한 인정은 물론 특

수성과 보편성의 조화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통일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갈등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모두 민주시민문화의 안정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일상적 생활문화와 의식 및 가치관을 포함한 생활세계의 내적통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23].

통일 후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현존하는 남남갈등의 요소들 즉, 지역갈등, 빈부의 갈등, 계층갈등 및 세대갈등 등을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하며, 이러한 갈등들은 사회통합 보다는 국론을 분열시켜 통일을 위한 대북정책을 비롯한 여러 정책들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첫째 과제라고 본다. 이러한 갈등들의 해소는 남·북한 간 통일 과정에서나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과정보다는 통일 이후 남·북 전체의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북 지역 주민 간의 갈등 해소 및 민족공동체 형성과 새로운 통일국가의 국민 정체성 형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사회통합의 길을 직업교육 차원에서 모색하고자 했다. 둘째 과제로는 사회적으로 내적통합을 위해 남한 주민은 자신과 다른 이데올로기와 가치관을 지녔던 상대방에 대하여 관용과 이해 및 민족애에 입각한 포용적인 수용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며, 사회통합을 위해 북한 주민들의 새로운 체제의 적응과 경제적 안정을 위한 개인적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조건인 물질적 가치선호와 사회적 자기표현 및 심미적 욕구 충족에 대한 삶의 질적 추구가 어떻게 민주시민으로서 잘 형성해 갈 수 있을지, 그 방안을 간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독일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더 많은 통일 준비와 통일을 주도했던 구서독의 경제적 능력이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통합의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통일 전 알 수 없었던 직업교육체제를 통일 후에서야 재평가하는 작업이 수행되었던 경우가 대표적이다. 서독 정부가 동독지역의 돌발적인 실업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노동시장 부양책을 펼쳤으며, 노동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전문기술 인력의 양성을 지

3) 전국 8개 대학, 34개 캠퍼스에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원하는 직업교육 및 훈련정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가 통합을 위한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남·북의 통일을 대비한다는 것이 단순한 제도의 차이만을 연구할 것이 아니라 실행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다루는 것이 후속 연구로써 남겨진 과제라 하겠다.

2. 논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일차적으로 동질성 회복이다. 이것은 갑작스럽게 해결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우선 혼란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 주민의 이주 가능성 억제정책을 통해 북쪽의 사회보장제도 확립 및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적용과 직업의 안정 등을 우선 적으로 갖춘 후에 화합과 통합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 안전성을 위해 단순한 직업교육의 기능과 기술의 전달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및 직업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우선시 하며, 기능 전달위주 교육보다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다각적 적응 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앞에서 제시 했던 사회적 통합은 결국 노동력의 재산을 위해 직업교육에 대한 역할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루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의가 필요하다.

- 첫째, 각 지역에서 우선 직업교육분야의 적극적인 인적 교류를 통한 교육체제통합 준비를 충분히 해야 함에 있어, 직업교육분야의 체제 및 과정의 통합을 위한 상호간의 교류와 공동연구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 것인지,
- 둘째, 북한 지역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수준이 떨어지는 북한의 기초적인 기술이전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 셋째, 직업교육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부작용 예측 및 개선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 넷째, 서로 다른 두 체제의 학위와 자격과 능력의 수준을 어떻게 보완하고 수정할 것인지,
- 마지막으로 교육내용과 질에 커다란 격차가 있어 화

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즉,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설 및 설비 투자, 직업교육 재정 지원 등 북한 지역의 직업교육 훈련교원들에 대한 재교육 및 계속교육 연구를 위해 남한의 교원들과 연계방안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이런 논의에 대한 방안 제시에 있어 본 연구는 구체화 하지 못한 미숙함이 있다. 이것은 차기 연구에서 좀 더 구체화된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특히 남·북한의 상이한 학제 개편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분단된 두 국가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실질적인 경제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하여 어떠한 지원정책으로 이끌어 갈지 연구해야 한다. 특히 우리야 말로 모든 분야에 대한 완전한 흡수 통합이 이루어져야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할 때, 그 만큼 북한의 모든 체제와 분야가 아주 낙후되어 있고 통합하고 융합할 수 있는 영역에 한계성을 갖고 있어 흡수적 수용이나 통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 또한 고려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박영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정책추진방향,”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제1호, pp.1-25, 2013.
- [2] 서대숙, “민족통합의 개념과 방향,” 한림대 민족통합연구소, pp.10-12, 1999.
- [3] Etzioni, *Political Unification : A Comparative Study of Leaders and Forces*,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p.4-10, 1965.
- [4] Everhard Holtmann, *Politik-Lexikon*, Oldenbourg : Muenchen, p.271, 2000.
- [5] *Deutsche Botschaft Seoul, 10 Schritte zur Wiedervereinigung : Deutschland ist... Wiedervereinigung*, pp.4-5, 2015.
- [6] D. Wiedemann, “Auf der Suche nach den

- Posaunen von Jericho," Die Zeitschrift fuer Erwachsenenbildung, Vol.1, No.2, p.18, 1994.
- [7] *Bruttoinlandsprodukt, Bruttowertschoepfung in den Laender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91 bis 2013*. Statistische Bundesamt. (참고 <http://www.vgrdl.de/VGRdL/tbls/ROB0.asp?rev=RV2011&tbl=R1B1>)
- [8] *Bruttoinlandsprodukt, Bruttowertschoepfung in den Laender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91 bis 2013*. Statistische Bundesamt. (참고 <http://www.vgrdl.de/VGRdL/tbls/ROB0.asp?rev=RV2011&tbl=R1B1>)
- [9] 이종성, "직업교육과정의 종합적 고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16, 2005.
- [10] R. M. Locke and W. Jacoby, *The Dilemmas of Diffusion: Institutional Transfer and the Remaking of Vocational Training Practices in Eastern Germany*, Cornell University Press, pp.33-68, 1997.
- [11] 이무근, *직업교육학 원론*, 교육과학사, 1999.
- [12] Thessalobiki, *Finanzierung der Berufsbildung in Deutschland Finanzierungsportaet*, CEDEFOP, 1998.
- [13] W. Dostal, *Beruflich-soziale Erwartungen und Qualifikationsfordernisse im gesellschaftlichen Wandel : Thesen aus de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Nuernberg : Institut der Bundesanstalt fuer Arbeit, 1992.
- [14] A. Broeker, *Die Reorganisation beruflicher Weiterbildung im regionalen Transformationsprozess der Neuen Bundeslaender: Destruktion und Konstruktion im Wechselspiel*, Frankfurt/Main: Europaeischer Verlag der Wissenschaften, 1996.
- [15] Peter Foerster, *Saechische Langsschnittstudie*, Leipzig, 2007.
- [16] 전성우,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독일통일," 역비논단, pp.262-284, 1994.
- [17] IKG, *Deutsche Zustaende im 20. Jahr nach dem Fall der Mauer*, (Institut fuer interdisziplinaere Konflikt- und Gewaltforschung, Universitaet Bielefeld) 2008(12).
- [18] Pollack, Detlef, "Das Beduerfnis nach sozialer Anerkennung. Der Wandel der Akzeptanz von Demokratie und Marktwirtschaft in Ostdeutschland," in :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APZ)*, pp.3-14, 1997.
- [19] GMF-Survey, *Deutsche Zustaende im 20. Jahr nach dem Fall der Mauer, Presseinformation zur Praesentation der Langzeituntersuchung Gruppenbezogene Menschenfeindlichkeit*, 2008(12).
- [20] 한국교육개발원, "북한의 사회문화 변화와 남북한 교육통합," pp.3-23, 2014.
- [21] 김명수 외, *북한사회의 이해*, 한양대학 출판원, 1997.
- [22] 한국교육개발원, "북한의 사회문화 변화와 남북한 교육통합," pp.24-30, 2014.
- [23] 정하윤, "남·북한 통일 이후 사회통합과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제13권, 제2호, pp.51-68, 2012.

저 자 소 개

이 성 균(Sung-Kyun Lee)

정희원



- 1998년 9월 : 독일 뒤셀도르프대학교(교육학석사)
- 2003년 12월 : 독일 뒤셀도르프대학교(교육학박사)
- 2000년 12월 ~ 현재 : 서울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 교육행정, 평생교육, 직업교육, 교육철학